

## “지역 중소기업에 더 많은 시공기회 줘야”

“지역 중소기업에 더 많은 시공기회를 줘야 합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태성종합건설 대표)은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물량이 감소하고, 신규 건설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회장은 “지방계약법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확대됐다”면서 “모든 공공공사에 지역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해 다양한 시공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발주제도 개선도 해결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공사 낙찰률이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률이 17년째 제자리에 멈춰 있다. 공공사업의 원가산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제는 사실상 공사비 삭감수단이 됐다.

오 회장은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개선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비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도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시설물의 성능 개선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신기술 활용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사업소는 지난해 2억원 이상 발주공사 45건 가운데 33건에 신기술 114건을 적용했다. 사업건당 평균 3.56개의 신기술이



### 公共공사 낙찰률 현실화 시급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등 통일시대 대비 선제적 투자를

나특허공법이 적용된 셈이다.

오 회장은 “특별히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분야까지 적용되면서 공사 관리가 어렵게 되고 해당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무리한 하도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정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로비의 단초가 될 수 있고, 하도급 업체와 분쟁의 소지도 있는 만큼 적정 수준으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도 건설업계의 관심사다.

오 회장은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강릉~고성 철도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촉구했다.

오 회장은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오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은 교통 흐름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교통 흐름을 잘 파악해 도로 확장 등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도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지역별로 노후 인프라 조사에 착수했다.

오 회장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지자체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업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취지나 규모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강원상품권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강원상품권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자금이 도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건설분야도 발주공사 계약시 계약금의 3~8% 정도의 강원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권고 차원이지만 사실상 강제적 부담이며 구매 비율도 과도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장비대 등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어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오 회장은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차원에서 강원상품권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앞으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위기 위식 속에서 건설업계가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